

국내 아웃소싱 시장 및 정책 동향

박진수
(부연구위원)

〈요 약〉

아웃소싱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위탁할 만한 업체가 없어 아웃소싱 전략을 펼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과 궤를 같이 하여 아웃소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웃소싱 활성화 정책은 시장활성화정책, 인프라정책, 기업지원정책, 산업조직정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추진대상 정책 중에서 서비스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수요 확대,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 파견법 관련 정책, 분사화 정책 등에서는 부처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의 중요성을 감안한 범부처적인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1. 서론

최근에 국내외 기업들의 동향 중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아웃소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경제, 지식경영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기업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됨에 따른 것이며, 이제 기업간의 경쟁에서 서플라이 체인간의 경쟁으로 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전략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업체와 생산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웃소싱 기업의 현황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아웃소싱의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아웃소싱의 수요 개발이 부족하고, 공급기업의 경쟁

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제반 정책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웃소싱은 산업이라기보다는 기능이므로 전산업에 걸쳐서 활성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아웃소싱의 기본적인 개념과 우리나라의 동향과 문제점, 정책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아웃소싱 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아웃소싱 개요

(1) 아웃소싱의 개념

아웃소싱은 기존의 도급, 하청 등과 별 차이가 없는 개념 같이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아웃소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경제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기업의 기능이 더욱 세분화되고 기존에 내부화하였던 기능이 외주화하는 추세가 증대하고 이를 둘러싼 기업 간 거래 내용이 재편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아웃소싱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Outsourcing Institute에 의하면,¹⁾ 아웃소싱이란 과거에 내부의 인력과 자원으로 수행하던 활동을 외부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청과 달리 핵심역량과 외부관계를 둘러싼 기업 전체의 구조조정을 내포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미국의 아웃소싱 센터에서 소개하는 세계 최고의 아웃소싱 전문가 Peter Bendor-Samuel에 의하면, “아웃소싱은 한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소유권을 공급자에게 이전할 때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아웃소싱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업무수행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구매하고자 하는 결과에 관심을 집중할 뿐, 그 과정은 공급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웃소싱은 보통 하청, 외주, 인력 파견, 컨설팅, 업무대행, 분사화 등과 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되는 것

〈그림 1〉 아웃소싱의 범위(「하나다(花田)」모델)

Yes	컨설팅	아웃소싱
업무의 기획·설계	인재파견	대행(외주)
No	No	Yes
	업무의 운영	

자료 : 花田光世, 사단법인 뉴비즈니스협의회(1997).

1) www.outsourcing.com.

으로 본다. 하청은 넓은 의미의 아웃소싱의 일종이지만 기획 등 업무의 중심이 발주기업에 존재하고, 외주는 하청, 업무대행을 포함하는 아웃소싱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인력 파견은 업무의 운영·설계는 하지 않고 업무수행과 관리만 책임을 지며, 컨설팅은 업무의 설계·기획은 하지만 운영에는 불참하고, 업무대행은 이미 계획된 설계하에 업무의 운영만 담당한다. 분사화는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별개의 회사로 만들어 모기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하고, 모기업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의 기획 및 설계여부와 업무의 운영여부를 가지고 아웃소싱을 컨설팅, 인재파견, 대행과 구분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문제는 아웃소싱과 유사용어들은 개념적인 수준에서는

구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아웃소싱 산업을 정의한다면, 공급관점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일부의 전문제조업체로 국한되나, 아웃소싱이라 하면, 수요측면의 기업경영에서의 아웃소싱 전략 전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아웃소싱의 형태

아웃소싱은 크게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활동을 외부에 맡기는 것과, 미래에 보유해야 할 핵심역량을 기업 내부에서 확보하기 힘들 때 외부에 일정부분을 의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아웃소싱은 <표 1>과 같이 비용절감형, 분사형, 네트워크형 등 핵심역량 외의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형태와 핵심역량 자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로

<표 1> 아웃소싱의 형태

형 태		목 적
비용절감형 아웃소싱		비용절감을 위해 중요치 않은 기능을 아웃소싱
분사형 아웃소싱	이익추구형	사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능을 아웃소싱
	스핀오프형	핵심역량 자체는 아니지만 자사보유 기술, 역량을 분사화하여 비즈니스화
네트워크형 아웃소싱		핵심역량 이외에는 모두 아웃소싱 - 공급업체와 네트워크 형성 코소싱
핵심역량 자체의 아웃소싱		핵심역량을 노출시켜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

자료 : 이광현(1999).

도 구분할 수 있는 등 여러 형태의 구분이 가능하다.

(3) 아웃소싱의 효과

아웃소싱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시급한 애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업종에서도 노사문제, 구인난 등의 문제로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아웃소싱 활성화는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지연, 고용안정 달성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술력으로 일단 성공한 벤처기업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능력이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웃소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련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웃소싱의 활성화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해당 부품업체 및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들간의 관련성이 제고된다.

넷째, 현재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경기변동의 폭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이 장기고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아웃소싱은 산업구조조정, 경기변동과정에서 유연적인 운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아웃소싱 관련 부문의 창출, 서비스 질의 개선, 가격 인

하 등의 긍정적 효과가 유발되어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구조고도화가 가능하게 된다.

3. 최근 동향과 문제점

(1) 미 국

미국의 Outsourcing Institute가 발간하는 *The Outsourcing Index*(2000)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아웃소싱 기업들은 향후 미국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속도보다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교통, 부동산 및 설비, IT, 물류 및 유통부문의 비중이 떨어지는 반면, 마케팅 및 세일, 인적 자원, 금융, 경영, 소비자 서비스의 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기능, 관리기능은 비중 변화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는 과거와 같은 전술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요인에 의한 아웃소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ITO(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에서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로 아웃소싱 형태가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BPO는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아웃소싱으로 소비자 서비스, 인적 자원, 금융, 관리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요가 증대할 것이며, 이는 소규모 기업에 의해 주도될 전

〈표 2〉 미국기업 아웃소싱의 부문별 구성 현황과 전망

단위 : %

	2000년	향후 3년간
교 통	5	4
부동산 및 설비	10	5
IT	20	18
제 조	7	7
마케팅 및 판매	6	8
인적 자원	9	11
유통 및 물류	10	6
금 융	7	10
경 영	4	5
소비자 서비스	7	11
관 리	15	15

자료 : The Outsourcing Institute Index 2000.

망이다.

아웃소싱의 동기는 제조업의 비용 절감 및 통제, 회사 주력사업의 개선, 세계수준의 경영능력 활용, 기타 목적을 위한 내부자원의 자유로운 이용, 내부적으로 입수 불가능한 자원의 활용, 리엔지니어링 편익의 확대, 관리하기 어려운 기능의 효율성 개선, 기타 목적을 위한 자본 활용, 리스크 경감 또는 분산 등에 의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2) 한 국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과 새로운 정보기술 수요 대응 차원에서 아웃소싱산업의 저변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1998년

SK와 대한항공이 한국IBM에 전산 부문을 아웃소싱하면서부터 IT 아웃소싱이 시작되었고, Y2K 문제, 기업 업무 혁신용 시스템(ERP), 금융 시스템 및 지식경영 서비스 수요(사내 DB 구축) 등이 정보기술 아웃소싱 분야의 수요를 확산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98년 7월부터 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되어 인력부문의 아웃소싱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며, 2000년 12월 현재 인력파견회사가 1,270여개에 달하는 등 동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을 동시에 가능케 하기 위해 분산화 방식의 아웃소싱이 비교적 활발히 일어났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01년 6월까지 30대 그룹의 76개 회사로부터 442개 회사가 분사되었고, 분사기업들의 종업원수는 6만 7,800여명이었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아웃소싱기업협회가 주관한 아웃소싱의 활용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²⁾ 응답기업 중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68.9%로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문은 청소(64.1%), 경비(64.1%) 등 용역분야이며, 그 다음 인재파견(40.6%), 건물관리(33.7%), 단체급식(31.7%), 물류대행(24.8%), 정보시스템(24.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 등 경비절감(23.1%), 인력 등 경영자원과 역량의 핵심업무에의 집중(15%), 조직의 간소화, 경영의 신속화(12.8%)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주요기준으로는 서비스의 품질과 내용(27%), 서비스 가격(21%)을 삼고 있으며, 선정방법은 아웃소싱 회사의 자료와 업계 평판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아웃소서의 부족을 가장 큰

걸림돌로 들고 있다.³⁾

현재 물류, 청소, 경비, IT부문 등에서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별로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자동차부문은 디자인과 인력을 중심으로, 생물산업은 R&D와 생산에, 전자부문은 EMS 형태의 완제품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부문에서도 IT 아웃소싱과 청소, 경비, 급식 등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고, 점차 전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3) 문제점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발달은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한데, 우리나라 아웃소싱 거래는 아직 미성숙한 편이다. 그 원인은, 수요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아웃소싱 의지 부족에 기인하는데, 이는 결국 한국의 기업문화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웃소싱 전략보다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수준이다. 기존 조직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데, 우리 기업 구성원들이 그 수용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1998), 경영자총협회(1999), 생산성본부(2000)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음.

3) 사단법인 대덕벤처밸리벤처연합회, 「벤처기업 아웃소싱 활용실태 조사에 대한 설문결과」.

공급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비즈니스 업체들이 영세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이 없어 아웃소싱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아웃소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신뢰성과 질 향상(22%)을 1위로 꼽았으며, 아웃소싱 회사의 전문성 확보(14%), 철저한 사후관리(12%), 아웃소싱 관련 법제도 정비(10%) 등을 꼽고 있는 것은 아웃소싱업체의 영세성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웃소싱 시장이 미발달된 요인을 꼽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인프라의 부족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웃소싱의 발달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이 아웃소싱 도입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상업무 선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방안 부재(36%), 아웃소싱 전문업체에 대한 정보부족(32%)이 꼽히고 있다. 이는 정보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핵심역량 분석,

아웃소싱 프로세스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도 아웃소싱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공업제품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국가표준체계는 무형성, 비저장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를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척도의 부재로 비즈니스 서비스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계약상 어려움이 있으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제도적 측면

현재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수 기준이 아웃소싱산업에서는 50명 이하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영세한 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인력과견업, 텔레마케팅 등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면서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업종이다. 이들 기업의 인력구성은 외근직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나 이들이 인력수에 포함되므로 영세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왔다.⁴⁾

또한 제반 규제와 관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형편인

4) 이 규정은 점차 수정 중이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정 후에도 대기업화되기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데,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업무의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기간이 너무 짧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실제로 모든 결정은 사용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지도감독은 사용회사가 아닌 공급회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외국인 고용문제, 여성인력, 고령자 재취업, 장애인 근로자 등의 취업문제와 관련해서 빈번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3) 불합리한 관행

아웃소싱 거래가 매우 다양하고, 최근에 생성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간의 불리한 계약과 결제가 발생하는데, 임시직 근로자의 해고, 고객 기업 부도시 아웃소싱 근로자의 인건비 보전 장치 미비 등 불합리한 관행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계약시 최저가 낙찰제는 아웃소싱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4) 체계적 산업정책 미비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신업종 및 신직종에 대한 체계적 정보가 부재하여 경영의사 결정 및 정책결정에 애로가 있다. 예를 들면, 아웃소싱사업자 등록시 해당코드가 없어서 유사한 업종으로 등록함으로써 동 산업의 평균적인 과표를 추정하기 어렵고, 산업지원의 틀을 갖추기 어렵다.

4. 정책동향

최근 정부의 정책은 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기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감이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함에 따라 최소규모로 올리고자 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시장활성화정책, 인프라정책, 기업지원정책, 산업조직정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 시장활성화 정책

이와 함께 비즈니스 서비스 발주자와 수주자와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닌 동반자적인 파트너관계로 발전되도록 아웃소싱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 수준의 객관적인 평가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형 서비스수준 협정(SLA : Service Level Agreement)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즈니스 서비스 업태별로 고유한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형 SLA」 개발 및 보급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아웃소싱계약에 있어 을사가 갑사의 횡포에 대해 호소할 경우, 불공정 거래가 제거되고,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연중 1회 아웃소싱산업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간에 인력, 정보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행 「과건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되고 있는 파견대상 업종 및 기간을 자율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

(2) 인프라 구축 정책

정부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부족을 해소하고,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DB(아웃소싱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요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산업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공회의소의 「기업공동 B2B 거래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공급업체 DB(아웃소싱 디렉토리)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웃소싱 관리자, 빌딩 관리자 등 업계 자율적인 자격증의 보급 확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각종 정책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격증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3) 기업지원정책

제조업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아웃소싱 기업을 중소기업정책하에 두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할 계획

이다. 예를 들면, 사업지원서비스(아웃소싱, 인력파견 등)에 대해 중소기업 기준을 상시 근로자수 50인 또는 50억원 미만에서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확대를 위한 제반 이벤트를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주간을 설정하여 서비스 품질인증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서비스大賞 시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 제고에 노력 중이다. 아웃소싱 수요업체들이 계량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국적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아웃소싱 활용 가이드라인」을 작성·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서비스대상을 시상하여 서비스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한편, 금융적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대상이 되는 지식기반서비스의 범위를 아웃소싱 관련 부문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기은·기보·신보 등 국책은행을 통해 「서비스산업 1조원 특별펀드」에 아웃소싱업종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4) 산업조직정책의 개선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주체들이 유연하게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 조직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 경제에 적합한 법인 형태인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 중이다. 유한회사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50인 미만의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조직이며,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등록세 및 법인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공급자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대기업 자본과 우수인력 유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분사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과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설립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분사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 계열사 편입 완화 또는 적용배제 등을 논의 중이나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 그것은 중소기업 범위의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문제와 분사기업의 초기 생존을 제고를 위해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조사시점을 분사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에 관한 것이다.

5. 정책과제

작금의 아웃소싱 산업정책은 산업지원정책에 가까워 보인다. 또한 아웃

소싱 정책의 과제는 서플라이 체인의 맥락 속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에 적절한 규칙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책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아웃소싱 기업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 최소단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아웃소싱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웃소싱되는 부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정책, 산업정책(경쟁력강화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공정거래법, 기업구조조정법, 통계정책 등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웃소싱 기업만을 살리기 위해 지원한다면,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이 불리하게 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처럼 제반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나, 실제로 관련 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아웃소싱 활성화 정책 노력이 한 부처의 노력으로만 끝날 수 있다. 아웃소싱 정책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정부 부처간의 적절한 제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